

1번	객관식 모의고사 10회
문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경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30번 문제 해설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적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3.6.14, 80다3231).

선택
지문
적중!

2번	기본서 19P
문 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②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청구권과 채권의 구별 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 외에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등 여러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구권은 채권 이외에도 물권과 가옥권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동거청구권 등). ②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지만 채권은 청구권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므로 청구권은 채권의 주된 내용이 된다. ③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정지조건부 채권에서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행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선택
지문
적중!

3번	기본서 19P
문 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경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신의칙에 기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④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판 2005.5.13, 2004다 71881).

정답
지문
적중!

4번	기본서 19P
문 4]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②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③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④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⑤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① 재조 제한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담 없는 증여의 수량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재조 제한대).

정답
지문
적중!

5번	기본서 19P
문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경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으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예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④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 불확정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지 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대판 1976.9.14, 76다1365).

정답
지문
적중!

6번	객관식 모의고사 3회
문 6] 아무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판례 ①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②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⑤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약외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3번 문제 해설 ② 제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X) 특별실종으로 5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추락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1일 24시인, 2일 0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와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선거권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번	전국 모의고사 2회, 객관식 모의고사 4회
문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판례 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요,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다.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약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전국 모의고사 2회 문6 해설 ③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해석이 상당하다(대판 2011.4.28, 2008다15438). 객관식 모의고사 4회 문8 해설 ①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8번	객관식 모의고사 11회
문 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판례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문11 해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비법인 재단·사단의 등기능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비법인재단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재단명의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9번	전국 모의고사 2회
문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판례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문7 해설 ③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⑤ 판례는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로 보고 있다(대판 1995.6.29, 94다6345). ※ 비교: 단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다(대결 2000.10.28, 2000마5527).

10번	민법정리자료 p.3
문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판례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③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④ 부침(夫妻)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 ① 교: 소송상 증언 → 허위 증언 당연 무효 → 사실 증언 통상용인 되는 범위 초과시 무효 성공보수약정 → ① 비변호사: 당연 무효 → ② 변호사: → 형사사건: 당연 무효 → 민사사건: 유효

11번	객관식 모의고사 6회
문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30해설
2019 갑령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③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 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당료 여부가 지급되는 하한선)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 주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대판 1999.4.13. 98다52483).

정답
지문
적중!

12번	민법 정리자료 2P
문 12]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규범적 해석의 적용범위 및 효과 [1] 표시자가 표시를 잘못하고 상대방도 표시된 대로 이해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단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착오에 의한 취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甲이 98만원에 매도할 생각이 있었으나 89만원으로 잘못 표기하고 상대방 乙은 89만원으로 인식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정답
지문
적중!

13번	객관식 문제집 147P
문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 17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3 갑령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송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② 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시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了知)하기 전이라도 표시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시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정답
지문
적중!

14번	기본서 163페이지
문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지문
적중!

15번	민법정리자료 p.6																		
문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강제 ①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이 있다. ② 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손에 좇아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④ 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table><tr><th colspan="2"></th><th>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th><th>무권대리행위</th></tr><tr><td rowspan="3">대리권</td><td>철회권자</td><td colspan="2">선의의 상대방만 가능</td></tr><tr><td>철회의 상대방</td><td colspan="2">법정대리인.본인은 물론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도 가능</td></tr><tr><td>행사기간</td><td colspan="2">법정대리인.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행사가가능</td></tr><tr><td colspan="2">거절권</td><td>○</td><td>×</td></tr></table>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대리권	철회권자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		철회의 상대방	법정대리인.본인은 물론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도 가능		행사기간	법정대리인.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행사가가능		거절권		○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대리권	철회권자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																	
	철회의 상대방	법정대리인.본인은 물론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도 가능																	
	행사기간	법정대리인.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행사가가능																	
거절권		○	×																

정답
지문
적중!

16번 문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갑형 ①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③ 제한능력이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객관식 p. 201. 문242] 지문 ④ 문 24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공인중개사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약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익을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17번 문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갑형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객관식 모의고사 9회 10번 문제 해설 조건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18번 문 18]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2019 갑형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객관식 문제집 29P 문 277]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2017 세무사 ①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②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③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④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	--

19번	민법정리자료 p. 13														
문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문 정중! <table><tr><th></th><th>소멸시효</th><th>제척기간</th></tr><tr><td>포기제도</td><td>시효완성 후 포기 가능</td><td>불가</td></tr><tr><td>단축·경감</td><td>가능</td><td>불가</td></tr><tr><td>배제·연장</td><td>불가</td><td>불가</td></tr></table>				소멸시효	제척기간	포기제도	시효완성 후 포기 가능	불가	단축·경감	가능	불가	배제·연장	불가	불가
	소멸시효	제척기간													
포기제도	시효완성 후 포기 가능	불가													
단축·경감	가능	불가													
배제·연장	불가	불가													

20번 문 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부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부의 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정리자료 p. 13 ■ 소멸시효와 변론주의의 적용여부 소멸시효의 기산점 → 주요사실, 변론주의 적용 ○ 소멸시효의 기간 → 법률사항, 변론주의 적용 × 비교: 취득시효의 기산점 → 간접사실, 변론주의 적용 ×
--	---

21번	문 2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①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②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③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객관식 모의고사 9회 문 14 해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위대판 1999.3.23, 98다59118). ※ 관습법상 물권: 동산 양도담보, 분묘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

정답
지문
적중!

22번	문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ㄴ. 임대차목적물 철회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불법한 원인으로 금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ㄹ.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본서 248P 6.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는지 여부 판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사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11.18. 2010다10000, 2011다10001 등). 물권적 청구권 관련판례의 정리 1.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거나,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3.27.). →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되는 물권에 의존하므로 그 기초되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양도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12.11.). → 물권적 청구권자는 청제당할 물건에 대해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물건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7.8. 99다 10000). 4.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중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1.24. 2001다10000).
-----	---	---

정답
지문
적중!

23번	문 23] 부동산의 물건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②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객관식 모의고사 2회 문 21]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① 소유권-점유권-저당권 ② 소유권-지상권-저당권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④ 유치권-절권-저당권 ⑤ 지상권-유치권-저당권
-----	---	---

정답
지문
적중!

24번	문 2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주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④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건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는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객관식 p. 290 문 348] 지문 ① 문 34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갑형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한 등기는 유효하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④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목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시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후행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식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	--	---

정답
지문
적중!

25번	문 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ㄱ.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ㄴ. 등기명의자가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경우,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객관식 문제집 287P, ㄴ. 객관식 문제집 285P 문 34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갑형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②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③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12 갑형 ①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 ④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중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	--

정답
지문
적중!

26번	전국 모의고사 1회
문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형 ① 등복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7.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형 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③ 등기나 등복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력을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⑤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7번	객관식 문제집 367P
문 27] 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형 ①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②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문 43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감형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8번	객관식 문제집 367P
문 28]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2019 감형 ①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②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③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④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⑤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 감형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로 점유권이 있다.

29번	객관식 문제집 262P
문 29]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형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316]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감형 ①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탈에 대하여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0번	객관식 문제집 367P
문 3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형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원인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문 374]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감형 ①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1번	객관식 문제집 367P
문 31]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경 ①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건물·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413]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감경 ①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 ② 10년간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평온·공언한 점유 ⑤ 10년간의 등기

정답
지문
적중!

32번	객관식 문제집 363P
문 3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경 ①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문 4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주력판리사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정답
지문
적중!

33번	전국 모의고사 3회
문 33]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乙에 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경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③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3.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지문
적중!

34번	객관식 문제집 390P
문 3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경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4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관하여 저장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장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③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지문
적중!

35번	객관식 모의고사 7회
문 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감경 ①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의도한 대지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건물·채권·채무·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 29]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③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지문
적중!

36번	객관식 모의고사 9회
문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갑형 정답 지문 적중!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관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문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경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의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7번	ㄱ.객관식 문제집 425P, ㄴ.객관식 문제집 426P
문 37]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정답 지문 적중!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ㄷ.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ㄹ.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498]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 갑형 ① 甲이 丙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수리시킨 경우, 乙은 그 수리비에 관하여 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신축건물을 간접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문 50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갑형 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8번	객관식 문제집 442P
문 38]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갑형 정답 지문 적중! ①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수 있다. ④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문 519] 권리질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갑형 ①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배서와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하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9번	객관식 문제집 450P
문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정답 지문 적중!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중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중축되어 부합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진현존하더라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없다. ㄹ.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529]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주택관리사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중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40번	전국 모의고사 2회
문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갑형 정답 지문 적중!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② 장래에 발생할 특종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서에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가 반복되지 않는다. ⑤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36.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종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 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